

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논문요약〉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국경 간 금융거래의 증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와 이를 추종한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적 전환과 더불어 단순히 금융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국경 간 금융거래의 증가를 포함하는 금융 지구화를 가속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었고, 따라서 금융 지구화는 위기라는 동전의 다른 면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금융 지구화가 신자유주의라는 보다 거대한 흐름의 기본적인 배후 기제이자 구성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탈규제, 시장개방 및 자유화, 사유화, 노동유연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민국가 내부의 경제적 격차 및

* 이 논문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0-33--B00041)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빈곤의 증대, 그리고 자산계급으로의 부의 집중 등을 수반한다. 금융 지구화는 자연적인 과정이기보다 몇 가지 역사적 요인들의 결과로 태동하고 확산되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전후 미국 내 금융자본의 부상, 세계 체제에서 1970년대 경제적 도전에 대한 헤게모니국으로서 미국의 대응,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금재정 확보 필요, 국내외적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세와 부의 집중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전후 금융 지구화와 자유화에 노출되다가, 위기 직후부터 급속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을 경험하였는데, 한편으로 위기는 민주정부에 의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정부들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금융지구화의 영향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국내의 경제 및 사회구조가 재편되고 고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및 격차와 빈곤 증대와 더불어, 정치적 민주화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주의는 형식화되고, 대중은 개별적 자산투자자로 호명되어 금융화에 의해 포섭되거나 부채의 덫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금융화에 의해 규정되었고, 2008년 이후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라는 권위주의적 보수정치의 복귀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금융지구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신자유주의화, 정치와 경제의 부조응, 2008년 이후 현재의 지구적 금융위기와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흐름을 개괄하고 문제들을 정리하여 향후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주요어:** 금융 지구화, 금융 자유화, 금융화, 시민사회, 한국 민주주의

1. 들어가는 말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에서 촉발되어 월가 전체의 위기를 낳고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최근까지 심화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게 된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견인차로 주목받던 중국에까지 현재 그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 개방도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2008년 말 국내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치는 상황을 겪는 등 금융위기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처럼 중심부 자본주의 경제의 악화된 상황이 초래한 국내 시장의 불안정성은 국내 정책당국자들과 위기에 노출된 관련업종 종사자들을 패닉상태에 빠뜨리곤 했다. 지구적으로 투자된 초국적 금융자본이 위기에 처한 중심부 자본주의 본국의 필요로 해외에 투자된 자금을 갑작스럽게 회수하는 상황이 닥치면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크게 자유로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된 자본이 손쉽게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까닭에, 국내 시장은 특히 최근 십수년간 높은 변동성과 이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왔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이전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고 이와 같이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의 통합을 가져오게 된 가까운 계기가 1997년의 국내 외환위기라면,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배경은 금융 지구화(financial globalization)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금융 지구화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전개가 국내의 경제상황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관련하여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향후 국내 민주주의의 전망을 구상함

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 지구화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및 추동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금융 지구화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국내 정치경제와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1990년대 초중반 국내의 금융 자유화 추진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1997년 국내 금융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금융 지구화의 영향이 국내 정치에서 증대하게 된 배경과 그 전개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 지구화의 전망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며 후자의 심화 확대가 모색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융 지구화와 민주주의

금융 지구화는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기관들에 의해 형성되고 매개되는 각국의 금융시장들이 전지구적으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가는 과정과 이렇게 변화한 현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활동범위는 지리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한 나라의 국경에서 취급되는 금융상품들의 범위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Porter 2005, 3-4). 하지만 오늘날 대중들의 눈에 자명한 사실처럼 인식되는 이러한 금융 지구화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성립된 현실적 귀결이다. 종종 지구화 혹은 세계화를 기술변동과 시장의 발전과 같은 진화적이고 불가피한 자연적인

과정처럼 묘사하는 지구화 예찬론자들의 논의가 주류 언론을 장식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지구화는 국제체제의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의 깊게 고안되고 실행된 역사적 산물로 파악된다(Helleiner 1994). 1930년대 대공황과 이후 2차 대전을 경험하며 등장한 국제 금융통화질서라고 할 수 있는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형성함에 있어서 전후 초기 신구 헤게모니 국가들이었던 미국과 영국에 의해 합의된 ‘배태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 즉 규제된 시장질서가 20세기 후반기에 플라니적 의미의 자유조정시장으로 복귀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시대로 이행함에 있어서, 금융 지구화는 핵심적인 매개이자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Ruggie 1998; Polanyi 2009).

브레턴우즈 체제로 상징되는 배태적 자유주의는 세부적인 구성요소들로서 금-달러 본위제와 각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그리고 무역이나 관세 정책 등에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개입 및 규제 재량권의 상대적인 용인 등을 특징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금융질서, 빈곤국의 경제개발, 그리고 국제무역 등의 이슈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각각을 관장하는 국제통화기구(IMF)나 세계은행(IBR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설립과 존재 역시 이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엇보다도 20세기 초 자본의 국경 간 자유이동을 촉진한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제금융질서가 결국 세계 대전과 같은 참화로 이끌어 간 금융투기 및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혼란을 낳은 근본 원인으로 본 케인즈와 동시대인들의 역사적 경험 및 관념을 반영한 전후 국제체제 설계의 산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비자유주의적인 국제금융질서와 국경간 자본이동의 통제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초기 설계

자들에 의해 강하게 옹호되었다.¹⁾

다른 한편 이러한 국제체제 설계의 현실화에는, 대공황 및 전쟁이라는 격변기 동안 뉴딜 체제가 수립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미국 내 정치세력관계의 재편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에 등장한 뉴딜 체제는 1933년에 역사적인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해 미국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등 강력한 금융규제를 실행함으로써 월가의 금융자본에 대해 타격을 입혔고, 이후 한동안 루스벨트와 정부의 경제개입을 보다 용인하는 케인즈주의적 국가관료, 산업자본가, 노동운동을 주요 축으로 한 소위 ‘뉴딜연합(New Deal alliance)’ 세력은 월가 금융자본보다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후 미국 산업 생산의 성장 및 1945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전 세계적으로 구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드주의적 합의/성장 모델’의 근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elleiner 1994; Lipietz 1991, 2장).

하지만 월가 금융자본은 자신들에게 족쇄를 채운 뉴딜의 규제법안들을 우회하거나 지속적으로 이것들의 해체를 시도하였고, 또한 미국 내에서 ‘뉴딜연합’에 기울었던 힘의 추 역시 서서히 월가 금융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금융 지구화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월가 금융자본 헤게모니 부상의 물꼬를 튼 것은,

1) 브레턴우즈 체제 설립기에 의도된 이러한 자본이동 통제 기조는 선진공업국가들에 의해 1940~50년대 기간 중에는 유지되었다고 평가된다. 이것의 유지에 기여한 요인들로는 이들 지역 내부에서 자본이동 통제를 옹호한 정치세력의 우세, 환율안정과 자유무역에 자본이동의 자유는 적합하지 않다는 신념의 확산, 전후 냉전 초기 서구와 일본 등 선진공업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자본통제를 관용하거나 지지해준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정책적 선택 등이 지적된다. 본고에서 가리키는 금융 지구화와 관계된 전후 민간 국제금융활동의 비약적 증대는 195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다(Helleiner 1994, 1장).

우선 1960년대 미국 밖에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통화 및 금융거래를 가능하도록 하였던 유로달러시장의 성장이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금융 지구화 및 최근의 위기와 연관된 국제적 사건과 주요 계기들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1960~1970년대 본격화된 유럽과 일본경제의 성장과 도전 및 미국 제조업이 입은 타격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1970년대 초 ‘닉슨쇼크(Nixon shock)’로 알려진 미국의 금-달러 태환 정치 및 고정환율제 포기 등으로 결정타를 맞은 브레턴우즈 체제의 변화와 국제외환시장의 부상, 1974년 미국 내 주식매매 중개수수료의 전면 자유화, 1970년대 석유위기로 인해 축적된 중동 석유달러를 월가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개발도상국 차관 투자에 동원한 소위 ‘석유달러 리사이클링’, 이어서 1979년 ‘볼커쇼크(Volcker Shock)’로 알려진 미국 내 금리의 급등과 따라서 대미차관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이 커지게 된 남미 각국의 1980년대 외채위기(소위 “잃어버린 10년”), 이후 남미의 대외부채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증권화 프로그램 가동(Seabrooke 2001) 및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본격화, 1974년 미국과 1979년 영국의 조치에 이어져 확산된 1980년대 선진공업국가들의 자본이동 자유화 조치,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 의한 국내 금융규제의 대폭 완화와 거대한 초국적 금융자본이 된 연기금의 급성장, 이 시기 기관투자자의 성장과 주주행동주의의 확산 및 기업 인수합병 붐과 기업 구조조정의 만성화(홍기빈 2008; Henwood 1998), 1990년대까지 본격화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대중적 투자문화의 확산, 1986년대 처 정부의 ‘금융빅뱅’에 의한 영국의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경험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IMF와 세계은행 등이 집행하게 될 보다 본격화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확대 적용으로 인한 빈곤의 세계화와 개발도상국 금융시장들의 개방 및 지구적 통합 확대(Chossudovsky 1998), 1990년대 초 유럽 통화체제의 위기, 1995년 멕시코 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위기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의 빈발과 구제금융 조건과 결부된 위기국의 금융시장 개방 및 세계금융시장 통합 가속화, 미국 내 뉴딜 시기 이래 지속되어 온 글래스-스티걸 법의 무효화를 사실상 확정화한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즉 소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Modernization Act)’의 제정과 월가의 미국 내 정치경제적 주도권 확립, 1990년대 후반 이후 2008년 이전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표현되는 영미형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선망의 확산과 금융주도적인 성장방식의 추구,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급성장에서 보여지는 금융지구화의 질적 심화와 불안정 요소의 증대, 2007년 미국과 유럽의 증권시장간 합병을 통한 최초의 지구적 증권시장으로서 뉴욕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NYSE Euronext)의 탄생(전창환 2008), 2001년 이후 미국 내 자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의 거품 확대 및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이것의 내파, 그리고 이어지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및 유럽 재정위기로의 전염(Mason 2009; Johnson and Kwak 2011; Lewis 2012).

무엇보다도 미국은 197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시장에서 독일과 일본 업체들에 의해 자국 제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하였고, 19세기 후반 이후 처음 경험하는 국제수지 적자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제체제에서 헤게모니 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 즉 국제체제 자체를 자국의 이해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을 활용하여,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달러 본위제를 폐기하고 지폐달러 본위제 및 변동환율제를 확대시킴으로써, 미국이 강세였던 금융자본의 활동반경을 지구적으로 보다 자유

롭게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금융 지구화의 주요한 배경이자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Strange 1997; Arrighi 1994).²⁾ 다른 한편, 20세기 중 후반에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국가 체제가 성숙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 사회의 인구학적 노령화 과정과 병행하는 연금 재정 부담 증대는 앞서 언급한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의 증대와 함께 연금의 민간자본화를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국내의 연금 자산을 전 지구적 자본시장과 연결시킴으로써 더 큰 수익의 기회를 발견하려는 금융자본의 이해와, 이에 적극 부응하여 복지재정의 부담에 대응하려는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적 전환이 금융 지구화의 또 다른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장진호 2011a; Aglietta 2000, 427).³⁾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 지구화의 전개와 확산은, 특히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국내경제의 금융부문 팽창과 더불어 기업의 구조조정 만성화, 제조업의 해외 이전 및 공동화와 위축을 결과하게 되었고, 이는 또한 이들 국가들이 갖고 있는 복지제도의 잔여적 성격 혹은 민영화와 맞물려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심화, 빈곤 증대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반면, 금융 지구화의 지리적 확대는 중심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금융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의 압력 속에서 특히 반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주요한 ‘경제위기들’을 경과하며 실현되었고, 이후 이들 지

2) 이러한 ‘포스트-브레턴우즈 체제’를 피터 고완은 ‘달러-월가 체제(Dollar-Wall Street Regime: DWSR)’로 표현하기도 한다(Gowan 1999). 이는 세계경제질서의 구성에 있어서 금의 가치에 속박되지 않은 달러와 이렇게 된 기축통화를 동원하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핵심적이 된 사실을 지적하는 용어이다.

3) 이를 위해서는 특히 소위 ‘이머징 마켓’으로 선전되는 준주변부나, 구사회주의권 체제이행국 제국들을 포함하는 나라들의 금융시장 개방 및 지구적 통합이 중요하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로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연금의 부상과 199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지구적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역의 경제는 중심부의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일종의 ‘금융식민지’로 전락한 모습마저 보여지게 되었다.⁴⁾ 이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으로 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의 금융자본이 특히 반주변부(소위 ‘이머징 마켓’)의 자본시장을 매개로 국제 투자수익이라는 형태로 이 지역에서 축적된 부를 이전해가는 현상이 고착되고,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부의 초국경적 이전과 맞물려 중심부 자본주의에서보다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과 수요 정체, 비용절감 압박으로 인한 노동유연화, 빈부 격차의 심화나 빈곤 증대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장진호 2011b).

뿐만 아니라, 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실은 금융 지구화의 확산 및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가 불러오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금융 지구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어떤 주요 연구에서는, 금융 지구화를 다양한 형태(대외원조, 대외직접투자, 상업은행 차관, 대외포트폴리오투자 등)를 띤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일반화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특히 1982년 부채위기 이후 남미에서 뒤이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미친 정치경제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세 가지 추세가 관찰된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후 경제가 성장으로 반등한 1990년대 초까지도 빈곤과 불평등이 남미 전역에서 증대하였고, 둘째는 1970년대에 급속히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억압을 정당화해온 군사정권들에 대한 신뢰가 줄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 와서는 이 시기 영향력이 커진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선호의 압력 속에서 남미 각국 정부의

4) 비판적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지구적 신자유주의화 혹은 금융 지구화에 있어서 (주로 미국 바깥에서 미국 내로 들어오는) ‘금융적 공물(financial tribute)’의 초국경적 이전을 주요한 원동력으로 중시한다(Harvey 2005).

자율적인 공공정책 선택의 여지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Armijo 1999, 328).⁵⁾

남미의 신자유주의화는 각국에서 자국 금융시장의 지구적 통합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는데, 남미에서 주요한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은 칠레 피노체트 정권의 경우와 같은 군사독재 시절에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메넴 정권이 보여주듯이 군부독재 이후의 민주화 이행 시기에 본격화되기도 하였다(Dezalay and Garth 2002). 후자의 나라들은 금융 지구화의 조건 탓에 1990년대 중반 특히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다른 남미국가들로 쉽게 전이되는 “데킬라 효과”를 거치며 발생한 경제위기와 맞물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나라들은 경제위기의 구제 및 수습 과정에서 급속한 대외적 시장 개방 및 국내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을 겪으면서, 대중들의 공공정책 형성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참여 확대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증발하고, 선거 및 정당경쟁과 같은 형식만 유지되거나 심화되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군주제화(monarchization of democracy)’ 즉 역사상 절대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전환되면서 군주의 힘이 상징적인 것으로 형식화되듯이 민주주의 역시 실질적인 내용이 신자유주의적 금융 지구화의 압력 하에서 형식만 남게 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5) 이 연구에서 서론과 결론을 작성한 편집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엄밀히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 규정 즉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자유 민주주의’로 한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로 한정하지 않고, T. H. 마셜이 말하는 시민권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사회권’을 포괄하는 내용을 갖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규제’ 역시 중요한 민주주의의 측면으로 간주한다. 이를 자유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사회민주주의의 요소로 볼 수도 있다(조희연 2009, 32). 필자는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층적 탈독점화와 평등화를 가리키는 ‘민주주의 사회화’의 길목에서, 민주주의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독점이나 불평등이 증대하는 ‘민주주의 공동화’의 위험이 국내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조희연 2008).

개념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작동하는 금융 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정치는 ‘초국적 경제주의의 (반)정치((anti-)politics of transnational economism)’로 특징지어지기도 한다(Teivainen 2002).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을 경과하면서 경제주의가 공고화되고, 국내 정치를 좌우하는 위계의 정점에는 지구화된 초국적 경제 주체(주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경제적 명령과 요구가 자리잡게 되는 현상이다(Soederberg 2004).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들의 참여 증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빈곤 감소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측면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안정의 필요와 같은 경제적 명령들에 의해 침묵되고, 지배계급과 국내외적 자본가계급의 정치적·사회적 지배는 오히려 강화되며 공고화된다. 이 와중에서 이에 항의하는 대중들에 대한 지배는 단순한 정치적 억압만이 아니라, 경제적 억압이나 일종의 포섭적인 방식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에는 ‘부채경제’에 의한 지배와 더불어 ‘대중투자문화’ 혹은 ‘일상생활의 금융화’로 표현되는 노동자 대중의 자본가화 혹은 투자자화를 통한 포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Lazzarato 2011; Harmes 2001; Martin 2002). 신용 및 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의 증대 및 펀드붐과 같은 ‘대중적 투자문화’의 확산은 이의 방편들이며, 이러한 기제들은 결과적으로는 부의 집중과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형해화와 경제주의적 지배 강화로 이어진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 지구화는 첫째,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국내에서 ‘뉴딜 연합’에 대해 월가의 금융자본이 다시 영향력의 우위를 회복하게 된 세력관계 재편의 산물이고, 둘째, 20세기 후반을 지나며 독일과 일본 등 다른 중심부 국가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도전받게 된 미국이 국제체제에서 자신의 ‘구조적 권력’을 동원하여 헤게모니

를 재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소산이며, 셋째로 중심부 국가들과 금융자본이 공공복지제도로서의 연금을 사적인 글로벌 금융자본으로 전환함으로써 통합된 지구적 금융시장에서 금융적 지대(financial rent)의 수취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자, 마지막으로 계급관계 면에서 지배계급 및 상층 자본가 계급이 국내외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노동계급과 대중에 대해 지배질서를 공고화하고 사회적으로 창출되어 축적된 부를 스스로에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용이하게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러한 역사적 재편의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지역과 국가 간 빈부격차 확대만이 아니라, 금융 지구화의 자장에 포함된 국가들 다수에서 내부의 빈부격차 및 빈곤의 확대와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위기의 증대, 그리고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 중 특히 금융 지구화에 선도적인 국가들 내부에서 금융팽창 및 노동의 불안정화 등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홍기빈 2008; Martin and Schumann 1997). 다른 한편 정치면에서는 대중들의 삶의 제반 영역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대중의 참여가 배제되고 국내외의 경제전문가, 기술관료들이 주도권을 차지하며, 민주주의가 정책적 차별성이 축소된 정당들 간의 경쟁과 선거로 축소되는 일들이, 노동현장과 사회적 세력관계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보다 강력해진 공세의 증대와 더불어 증대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초국가적인 지배계급과 지구적 자본주의의 질서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일국내 지배계급은 심지어 협소화된 민주주의를 권위주의적으로 우회하

6) 특히 이 마지막 측면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전후 브레턴우즈 체제의 황금기 혹은 포드주의적 합의기에 사회적 부의 총량 분배에서 상위층이 차지하는 몫에 비해, 금융 지구화가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이 집단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밝히는 다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Duménil and Lévy 2006).

〈표 1〉 금융 지구화의 역사적 요인들

주요 차원	목적과 내용	결과
• 미국 내 세력관계	'뉴딜 연합'에 대한 월가 금융자본의 우위 회복	미국 내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화 가속화
• 중심부 국가들 간의 경쟁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다른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	구조적 권력을 통한 달러월가체제 확립으로 브레턴우즈 체제 우회, 미국의 금융적 팽창전략 및 중심부 국가들내 금융 자유주의의 확산
• 세계체제 내 관계	중심부 금융자본의 연기금 자본화를 통한 수익기회 확대와 중심부 국가들의 복지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반주변부의 금융시장 개방과 지구적 시장통합
• 지구적/일국 내 계급관계	지배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자본 축적에 대한 일국 내 법적·사회정치적 규제 장벽 제거	노동유연화, 격차 및 빈곤 확산, 민주주의의 군주제화, 부채경제와 대중투자문화에 의한 지배

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지배를 정당화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유지하려는 기획으로 부채경제를 구축하고 대중투자문화의 확산과 같은 사회문화적 기제를 동원하기도 한다.⁷⁾

7) 여기서 초국가적 지배계급과 각국의 하위 파트너에 대한 고전적 논의로는 종속이론의 '매판적 자본가계급(comprador bourgeoisie)'에 대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현대적 맥락에서 특히 남미 법률가들의 초국적 자본에 대한 매판적 역할에 대한 논의로는 드잘레이와 가스(Dezalay and Garth 2002, 12장)의 논의 참조. 국내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법률회사 김앤장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임종인·장화식 2008).

3. 1990년대 초중반 국내의 금융 자유화와 1997년 외환위기

그렇다면 과연 국내에서 금융 지구화라는 세계사적 과정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에 국내 경제가 빠져들게 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까지 당시 언론에서 표현된 1997년 금융위기에 대해 15년이 지난 현재 망각이 지배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위기와 그 이후 사태의 진전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크고 깊은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국내의 여러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은 근본 경험들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된 ‘세계화’ 정책의 추진은 1997년 위기의 전사(前史)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⁸⁾ 특히 김영삼 정부는 1995년 말 언론에서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일컬어지던 경제개발협력기구(OECO)의 한국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며 서둘렀는데, 이를 위해 몇 해 전인 1990년~1992년에 미국 정부의 제안에

8)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드라이브 추진에 핵심적인 인물은 1994년 12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에 임명된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 박세일 교수였다. 그는 1992년~1993년 미국 컬럼비아대 법대 방문 시절 지구화에 대해 연구하게 된 이후 국내에 돌아와 서울대 내에서 작은 연구모임을 결성했으며, 이후 대통령이 되기 전 김영삼 후보의 자문역을 하며 세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졌다(Thurbon 2003, 350). OECD 가입은 세계화 정책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해석되었고, OECD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은 국내의 금융 자유화 조치 가속화였다. 또한 김영삼 정부에서 1995년 1월 만들어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특히 주도한 한국의 OECD 가입 추진은, 1994년까지 국내 재무부와 한국은행 등 당시까지의 주류 경제관료들의 저항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진 경제자유화, 특히 금융개방 조치를 외부의 힘을 빌려 돌파하려는 국내 관료계 내부투쟁의 산물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Thurbon 2003, 352).

의해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양자 회의의 형태로 갖게 된 한미금융정책회의(Korea-US Financial Policy Talks)에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에 한국 정부가 부응하여 제출한 국내 금융 자유화 일정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 이에는 국내 금융시장 개방일정 가속화 등을 포함하는 급격한 국내 금융 자유화를 향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향후 OECD 가입과정에서 미국 측의 도움을 받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계산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과의 양자회의 결과, 1993년 5월 한국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 자유화와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진전된 일정을 명시한 ‘청사진’을 미국 재무부 측에 제출하기에 이를 정도로 국내 금융정책적 전환, 그리고 경제구조의 전환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개입은 양자주의적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형식을 갖는 것이었다. 게다가 대통령에 취임한 해인 1993년 7월에 서울을 방문한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금융 자유화를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등과 더불어 촉구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국내 수입시장의 개방을 중점적으로 강력히 요구하였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형태, 즉 금융시장 개방의 형태로 경제적 개방 공세가 거세게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9) 이 당시 신문 등 언론에서는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찬반론의 논쟁이 실리곤 했는데, 당시 가입반대론 진영은 주로 시민단체 소속의 전문가나 활동가였다. 이들은 OECD 가입과 맞바꾼 금융 자유화 조치 등이 향후 국내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미 언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지나친 비판론으로 보이기조차 했던 이들의 주장은 이후에 현실화된 위기와 사태 전개를 되돌아 볼 때 오히려 너무 들어맞아 섬뜩한 구석마저 있다. 현재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동시다발적인 양자관계의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논쟁 구도 역시 과거 OECD 가입 국면의 논쟁과 크게 다른지는 역시 사태의 결과가 드러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일까? 조급하고 부실한 듯이 보이는 협정 추진에 대해 주로 비판 측에 선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던 문제점들이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뭘가 미래를 대비하며 현상의 변화를 적극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자유주의적 세력 및 이런 입장에 선 정부 관료들의

그런데 국내 금융 자유화의 요구는 미국 측의 주도에 의해서만 견인된 것은 아니었다. 국내의 경제 관료 역시 금융 자유화에 대한 신념으로 이미 충분히 무장되어 있었고, 이는 국내 경제 관료 및 주류 경제학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즉 규제완화와 시장 자유화,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을 포함하는 조치에 대한 신념의 확산과 맞물린 결과이기도 했다 (Amsden 1994). 국내의 금융시장을 포함하는 경제 전반의 자유화 조치에서 국내 경제전문가 및 관료들은 먼저 이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정책적인 전환 조치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도 했다. 이는 구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후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통상 ‘워싱턴 컨센서스’를 제안하던 국제경제기구와 미국의 경제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해당 체제이행 국가들 내부의 경제 전문가와 자유주의적 정부관료들이 앞장서서 ‘충격 요법’을 주문하기도 했던 사실과도 유사한 것이었다(김수길·이정재·정경민·이상렬 2003; Bockman and Eyal 2002; Shin and Chang 2003).¹⁰⁾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추진된 국내 경제관료제의 대대적 재편 즉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통합 및 이후 ‘모피아’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거대하고 결과적

시도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주류 여론에서 더 현실적인 진단과 방안으로 각색되고 자리잡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10) 한국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정에서 1980년대 5공화국 시기 대통령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을 필두로 한 관료들의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지주형(2011, 5장)의 논의 참조. 흥미로운 것은 김재익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관료층이 등장한 초기에 추진한, 당시로서는 다소 비주류적인 경제운영 방향 설정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든 회고적으로 구성된 정당화든) 후일 강경식 등 관련 인사들이 그 배경과 자신들의 동기에는 ‘분권화를 통한 정치적 민주화가 숨겨져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주형 2011, 120). 그런데 이러한 ‘경제자유화’가 전문가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주화’라는 형식을 참조하거나 구실로 삼게 되는 일은 신자유주의 전환의 세계사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이 전제되는 ‘민주화’에서 사실상 대중의 참여와 사회권의 확장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비어 있기 십상이다(Centeno 1997; Dezalay and Garth 2002).

으로 무능력했던 재정경제원(MoFE)의 탄생은, 물론 내부 일각의 반대는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보다 자유주의적 경향의 경제기획원이 재무부를 통제할 것을 의도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세계화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내각 개편이 이때 이루어졌다(Thurbon 2003, 351).

이러한 ‘관료들의 전향’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으니 여기에는 국내 재벌의 성장이 특히 중요하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의 수혜자이자 특히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서 정책금융에 의해 분배된 자금을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간 재벌들은 1980년대를 경과하며 이제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도전의 준비를 갖춘 경제권력으로 대두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입안해 추진하던 1960~1970년대를 ‘포괄적 발전국가 시기’로 파악하는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의 민간 경제 부문에 대한 영향력과 범위가 재벌의 성장과 더불어 축소되면서 ‘제한적 발전국가 시기’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분석도 존재한다(Kim 1997).

재벌들은 1992년 대선 국면에서 현대재벌의 총수인 정주영이 새로운 정당인 국민당을 창당하고 김영삼, 김대중에 대항하는 제3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될 정도로 경제적 영역의 권력을 넘어서 정치권력을 지향할 정도가 되었고, 그 직전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한국사회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되기도 했다. 1993년 등장한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특정 재벌 즉 삼성이 다른 재벌보다도 정부와 더 가까운 관계임을 시위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여주는 일들도 있었고 이 시기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벌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와중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데, 그중에서 금융 자유화 역시 중요한 의제가 되었던 것이다. 즉 이 시기에 한국 재벌이 신흥 다국적 기업

으로 부상하여 세계적으로 시장 확장을 적극 전개해가는 상황은, 재벌들에 의한 국내 금융 자유화 조치의 주문과 맞물려 있기도 했다.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사회주의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 재벌들에게는 이 지역들에 직접투자의 형태로 활발한 진출을 시도하거나 세계시장의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었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전까지 고부채 상태에 있었던 국내 재벌의 입장에서 투자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증가했던 것이다(Kim 2000). 금융 자유화는 이렇게 국내 재벌들의 자금 조달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순위에 놓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 자유화는 금융 지구화의 효과를 국내에서 또한 가속화시키기도 할 것이었다.¹¹⁾

물론 재벌들이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만 해외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중공업 부문의 과잉증복투자가 주요 이슈가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11) 금융 지구화, 금융 자유화, 금융 팽창, 금융화 등의 용어가 본고에서 엄밀하고 상세한 규정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각각의 관계를 대략 정의하자면 역사적 운동과 현상으로서의 금융 지구화는 그 영향에 노출된 일국 내부에서 금융 자유화(즉 금융부문에 있어서 민간 시장행위자의 거래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촉진하고, 금융 자유화는 동시에 일국 경제를 세계시장에 더욱 긴밀히 통합시키는 결과를 낳아 전술한 금융 지구화의 효과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금융 팽창 혹은 금융화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금융부문이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 혹은 높은 수익성으로 축적의 핵심부문을 차지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거나, 기업의 수익이 점차 금융적 투자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재무적 가치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 등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유철규 2008; 조복현 2007; 장진호 2008a; 홍기빈 2008).

이, 재벌들은 규모의 확대를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될 종자돈의 필요에 의해서도 외화 차입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재벌들의 제2금융권 진출이 가속화되지만, 특히 김영삼 정부 시기에 들어와 금융 자유화 덕분에 재벌계 제2금융권 계열사로서 우후죽순 생겨난 종합금융회사(종금사)들은 재벌들이 외화차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결국 1997년 국내 외환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 종금사들은 일거에 정리되는 신세에 처하게 되었다.

또 금융 자유화 조치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에 초국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차원에서 들어온 외국자본의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1996년~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일종의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를 국내 금융시장에 가져온 데에는 이처럼 국내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급속한 철수가 위기의 방아쇠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1993년~1995년 사이에 이루어진 단기외자도입 자유화조치나 1994년 가을에 이루어진 3개월 만기 달러차관도입 자유화조치 등은 이처럼 외국자본의 급속한 국내시장 유출입에 기여하였다. 또한 단기 대외부채는 1997년 중반에 이르르면 총대외부채의 68%에 이르게 되었다(Kwon 2004, 85).

199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서 한국 정부는 급속히 빠져나가는 외국자본의 물결에 요동치며 급추락하는 주식시장과 급등한 환율,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방출된 외환보유고의 고갈, 일본계 금융기관들을 필두로 한 외국 금융기관들에 의한 국외차입의 만기상환 연장 거부 등과 같은 사태들에 직면하여, 마침내 11월 21일 IMF의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후 미국 정부, 특히 미 재무부는 IMF와 공조하여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 관련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율하였고 애초 남미에 처방되기 위해 구상된 ‘워싱턴 컨센서스’ 프로그램

의 한국 내 실행을 요구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강력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제 도입 등과 같이 나중에 “IMF 플러스 알파”로 알려지는 추가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을 앞장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김수길 외 2003).

이러한 ‘플러스 알파’는 특히 1997년 5월 김영삼 정부의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에 취임한 이래, 그 해 말 위기 직후에는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위임을 얻어 미 재무부와 의 구제금융 협상을 주도한 김기환을 위시한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의 성격을 드러내 주기도 하는 것인데, 이들은 당시 국내 위기 대처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을 심지어 초과해서라도 국내의 노동을 공격함으로써 국내의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다. 이후 십수년간 대중들의 삶의 질이나 공공적 참여와 같은 측면에서 국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 만성적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불안정화에 당시의 이 ‘플러스 알파’ 조치들이 물꼬를 텃음을 상기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국내 사회경제구조의 급속한 심층적 전환에 기여한 국내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의 역할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¹²⁾

1997년 국내의 경제위기 직후 수립된 IMF 관리체제하에서 요구되

12) 따라서 국내에서 1990년대 초중반에 미속하게 추진된 금융 자유화가 초래한 1997년의 금융 위기는 역설적으로 더욱 부주의하게 일방적이고 급속도로 진행된 금융 자유화를 현실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는 이후 오늘날까지 증대되고 만성화한 국내의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중속 상황에 기여해왔다(장진호 2011b). 2000년 말에 이르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이미 OECD 금융시장의 개방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Kwon 2003). 따라서 국내에서 1997년 위기 이전의 금융 자유화를 ‘얕은 단계의 금융 자유화+지구화’라고 볼 수 있다면, 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서 진행된 금융 자유화는 ‘깊은 단계의 금융 자유화+지구화’라고 할 수 있다.

고 추진된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부문의 4대 개혁은 국내 경제제도와 구조 전반의 급속한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위기가 가중되거나 이후 장기적으로 경협하게 될 새로운 위기의 발판을 놓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조치들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 당국이 취한 조치들에서 보이는 것들과는 반대로, 경제위기의 시기에 오히려 국내 경제의 돈줄을 조이는 방식 즉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처방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이다(Shin and Chang 2003).

IMF는 우선 금리인상과 금융기관의 정리 및 통폐합, 그리고 금융기관 건전성의 강화 조치 등을 요구했는데, 이 와중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고 금융기관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또 금융기관들은 IMF 등의 요구조건을 맞추어 생존하기 위해 기업에 대출된 자금을 신속히 회수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서 역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자금줄이 말라 심지어 흑자를 유지해오던 기업들마저 도산하고 대량실직을 낳는 일이 속출하게 되었다. 알짜배기 자산들을 갖고 있던 기업들은 이렇게 초래된 자금기근의 상황에서 판매 가능한 자산들을 주로 구입 여력이 있던 외국 자본과 투자자에게 헐값에 대대적으로 매각하게 되었고, 1997년 금융위기 직후의 처리과정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과 기업 등 국내 자산의 초국적 소유 이전 즉 해외매각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일어나, 현재까지 그 여파가 국내 경제 전반에 크게 미치고 있다. 가령 주요 시중은행이던 제일은행은 해외매각 이후 국내은행들의 기존 경영관행과 달리 은행들의 가계대출 붐을 선도하였고, 이는 이후 장기간에 걸쳐 현재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된 국내 가계부채 폭증의 발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난에 가까운 경제위기에 직면한 와중에서 1997년 말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등장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 초기에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과 이에 따른 희생을 개인의 역사이자 상징적 자산으로 갖고 있는 김대중 후보에 대해 표를 던짐으로써, 국내의 노동자 대중들은 위기를 초래한 보수여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동시에, 이후의 위기 처리 과정에서 참여 민주주의적 절차나 자신들을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보다 더 담보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노동자 대중들의 민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 IMF의 구제금융 및 경제관리 상황과 결부된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의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초국적 경제주의의 (탈)정치’의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참여와 권리 확대 및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불평등과 빈곤의 개선이라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이 크게 제약되고 위축되는 국제적 선례들을 국내에서도 역시 답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초국적 신자유주의 지배블록’과 국내 신자유주의적 관료, 재벌, 경제 및 법률전문가, 신자유주의적 언론 및 지식/담론 생산기제 등을 포괄하는 ‘국내 신자유주의 블록’이 함께 사회적 헤게모니를 강하게 행사하며 위기에 처한 국내 경제의 전환 과정을 주도해 나가게 된 사실과, 정권교체로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대중들의 기대가 곧 좌절된 일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장진호 2008b; 지주형 2011).

이처럼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한 가운데 오히려 국내외 신자유주의 세력블록의 연합적 헤게모니에 의해 국내의 정치경제적 구조전환이 주도된 상황은, 오히려 국내에서 이러한 전환의 방향과 민주주의의 위축에 저항하는 세력 특히 노동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러한 저항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는 새롭게 집권한 정치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역설적으로 초래한 정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997년 위기 발발 직후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구조조정의 압력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외국자본의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는 여론의 압박에 의해 국가경제의 회복에 부정적인 행동으로 손쉽게 낙인을 찍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표 2〉 1990년대 이후 급진전된 국내 금융 자유화/지구화의 요인과 결과

주도 세력	목적	내용	결과
• 신자유주의 정부관료/경제전문가	관료제 내부 새로운 권력의 중심 형성, 신자유주의적 이념의 실현	1997년 경제위기 전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전환 주도, 'IMF-플러스' 제안 관철	새로운 기술관료적 통치성 강화, 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에서 전문가주의/엘리트주의에 의한 민주적 참여 배제, 구조개혁 과정 지배
• 국내 재벌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외 투자(투기?)에 필요한 자원 확보	종금사 설립 및 금융시장 자유화 요청, 국내외 과잉투자에 의한 부채비율 증대, 해외단기자금 차입 증대로 위기 촉발	고부채 성장모델 지양, 재벌 체제의 재편과 상위재벌 경제집중도 강화, 재벌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주주 자본주의적 경영 확산, 만성적 구조조정, 비정규직 고용 확대와 노동불안정화
• 미국/국제기구/초국적 자본	한국시장의 자유화/개방과 지구적 금융시장 통합으로 국내 금융기관/기업들의 소유지배 확대, 국내 금융시장 투자 수익 확대, 국내 시장 진출 확대	1990년대 초 한미금융 정책회의 주도과 국내 금융 자유화의 가속화 요구 관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요구사항 관철	1997년 위기 직후 국내 자산 소유의 대대적 해외 이전,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과 종속상황의 만성화, 국내 자본시장을 통한 초국적 자본에 의한 금융지대의 수취 확대

사실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세력에 대한 ‘반공주의적 억압 및 배제’의 효과를 갖는 ‘체제 불순세력’이라는 낙인과 유사하게,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정당화해주는 효과를 갖는 신중의 헤게모니 담론으로 기능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저항은 외국인 투자의 방해 혹은 외국자본의 철수를 불러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류 언론의 선전이 주도한 일종의 ‘경제주의적 억압 및 배제’였던 것이다. 이 기간에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이와 같은 국내의 여론 형성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따라서 ‘위기로부터의 경제회생이라는 공공선을 훼손하는’ 또 다른 불순세력이 되어버렸다. ‘초국적 경제주의의 정치’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는, 이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위기 직후 한국사회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였다.

4. 보수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자산적 개인주의와 시민사회의 금융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국내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은 매우 급속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에 실행된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금융 자유화와 장기간 누적된 재벌 체제의 모순이 함께 폭발하여 초래된 금융위기를 관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더욱 철저한 금융 자유화가 국내외 신자유주의적 주도세력에 의해 처방책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는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위기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미국 정부의

방식에 비추어보면 정반대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기 이후 국내에서 오히려 확대되고 철저하게 실행된 금융 자유화는 국내 금융시장을 지구적 금융시장에 더욱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소유 비중은 1997년 위기 직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거의 40%에 육박하게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내 주요 시중은행 주주들은 절반 이상을 외국인 주주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 은행의 경영행태는 금융의 공공적 성격보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시장주의적 금융’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게 되어, 최근까지 국내 거대 시중은행들의 영업이익은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들의 그것에 비견되거나 능가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게 되었다.¹³⁾ 그리고 이것의 이면은 금융기관들의 이자와 수수료 수입 등을 크게 증대시킨 가계대출 및 소비자 금융의 팽창이자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수의 폭증이기도 하다. 즉 ‘부채경제 구조로의 전환’과 그 사회적 결과로서 ‘대중들의 채무자화’가 오늘날 한국 대중들의 삶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 것이다(Lazzarato 2012).¹⁴⁾

13) 이러한 금융의 공공성 무시와 수익성의 일방적 추구는 최근까지 많은 문제들을 낳은 바 있다. 대출을 요구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시중은행이 위험한 파생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문제를 낳은 KIKO사태나, 결국 저축은행의 파산 도미도로 이어져 다수의 예금자들을 희생시킨 저축은행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저축은행들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회사로 출발 하였으나, 2005년 저축은행간 M&A의 허용, 2006년 여신한도 규제완화 등의 결과 대형화·계열화를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2011년~2012년 다수가 퇴출되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차병석 외 2012, 263).

14) 따라서 1997년까지 국내의 경제주체 중 정부와 가계의 채무구조는 비교적 양호하고 기업부문이 고부채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던 데 반해, 현재는 기업부채의 위험이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된 가운데 공공부채도 증대하였고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이미 위기 수준을 넘어선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령 1997년 이후 국내 가계저축률은 급속히 하락하고(1998년 23.2% → 2007년 2.3%)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미국의 그것보다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병천 2011, 30). 따라서 국내의 개인과 가계가 금융기관/금융업자들의

1997년 위기 이후 등장한 소위 ‘민주정권’들은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유화/지구화를 민주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대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 조건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구상 및 실행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금융 자유화와 지구화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듯한 방향의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두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정책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2년 7월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12월에 제시된 ‘동북아 금융허브 3단계 추진 로드맵’을 들 수 있다(금융경제연구소 2010, 6장).

먼저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부제를 ‘주식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으로 단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시장 중심적 금융제도 구축을 지향한다. 이는 은행중심적 금융제도로 특징지어지는 독일 등 유럽대륙의 국가들을 대표적 모델로 하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와 대비되는 영미식 자유주의적 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의 특징이기도 하다. 즉 김대중 정부 시기에 국내 경제정책의 형성에 영향력을 갖는 경제관료 및 전문가 집단은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로 선전되던 영미식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기본 구상으로 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한 정책과제에는 네 가지가 포함되는데 주식에 대한 장기수요 기반 확충,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 육성, 증권시장 운영체제 효율화, 주주중심의 경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그것들이다. 과제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이후의 국내 제도적 전개와 관련

채무노예처럼 전락하게 되었다는 진단마저 제출되고 있다(김순영 2011; 제윤경·이현욱 2012). 이런 가계부채의 급증 역시 한국 민주주의에 새롭게 등장한 위기 요소로 상존하고 있다. 민주적 주체가 자율적이고 자유롭다면, 그 구성원이 채무노예화된 사회는 당연히 민주적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여 주목되는 것으로는 기업연금제도의 조기 도입,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유도, 자산운용업의 발전 유도, 증권시장을 상해·싱가포르·홍콩과 경쟁 가능한 체제로 개편,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의 주주중심 경영체제 정착 등이 있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주식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데 더하여,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는 관점을 구체화하였다. 이 시기에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주요 조치들 중에는 펀드투자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과 개정(각각 2003년, 2004년), 외환보유고를 투자자산으로 운용할 일종의 국부펀드로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2005년), 연기금 주식투자금지조항을 삭제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4년), 퇴직연금제도 도입(2005년), 자본시장통합법의 공포(2007년) 등이 있다. 특히 2007년 8월에 공포되어 2009년 2월 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에 관련된 기존 6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서,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을 유도하며, 단순하게 금융제도를 은행이 아니라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경제를 금융산업 중심의 구조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금융경제연구소 2010, 204-205).

이명박 시기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졌으며 2008년에는 헤지펀드 도입계획이 발표되었고, 기획재정부는 국경 간 자본이동 계획의 조기 이행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요소로 제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금융을 보고 있다는 구상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이전 두 정부 간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산분리 완화(혹은 폐지)’는 차이가 두드러지는 측면이다. 즉 금융과 산업재벌 간 분리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산업자

본의 금융지배 등 자본의 독점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거대해진 자본의 규모와 영향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은 예측가능하다. 2008년 9월에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투자은행에 환상은 다소 위축된 듯하지만, 2010년 2월 금융위원회와 조율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에서는 아시아 리딩뱅크의 출현 유도 및 금융허브만이 아니라 국내 금융자본의 해외 진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는 10여 년간 모델로 삼아왔던 영미식 금융시스템이 2008년의 위기로 내파하고 선진국들조차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을 대세로서 목도하면서 금융규제와 감독 강화를 불가피하게 보았고, 특히 폭증하는 국내 가계부채의 위기상황 속에서 서민금융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새롭게 강조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실상 자통법 시행,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및 철폐 기조 추진 등 금융규제의 완화는 계속 진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연출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로 임명하는 등 ‘정실 자본주의적 금융’이라는 구태가,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 기조에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두 정부들과 차이를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이상 꾸준히 진전되어 온 금융 자유화 조치들은 위기 이후 한국사회를 크게 변모시켜 놓았다. 주주중심적 기업경영의 정착은 기업들의 주가 관리와 수익성 중시 경영, 높아진 배당률 속에서 고용유연화를 확산시켰다.¹⁵⁾ 이는 외환위

15) 가령 삼성전자의 배당률은 1990년대 초 13%에서 2002년 이후 100%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기 직후 도입된 정리해고제나 파견근로제의 확산과 더불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을 확대시켰으며, 기업들의 구조조정 만성화와 해고나 조기퇴직을 맞이한 노동자들의 영세자영업자화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노동의 저항은 오히려 소위 민주정부 시기에 더 큰 시련을 맞게 되었는데, 김영삼 정부 시기에 비해 경제위기 후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전환과 노동유연화가 추진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노동문제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평균 구속자 수가 2배가 되었던 것이다(장진호 2012).

국내에서 이처럼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유화와 금융 지구화, 금융화가 가속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만성화되고 일자리와 지위가 급속도로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계급적 주체로서 고용, 지위 및 소득 불안정에 맞서기보다는 ‘재테크’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일종의 ‘자산적 개인주의(asset individualism)’ 즉 ‘현명한’ 투자를 통한 개별적인 자산축적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멧돌에 대응하게 되었다. 노동자 주체는 점차 투자자 주체가 되어 갔고, 대중적인 역할 모델은 더 이상 전태일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자이자 거부인 워렌 버핏이 되었다. 이러한 대중적 주체성의 변화에는 상술한 정부정책들의 추진과 국내 경제의 금융화 및 지구적 통합 가속화에 따른 제도적인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계기와 현상들도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 상황 진단의 주요 지표로서 주가 지수의 중요성 부상, 1999년 벤처붐과 2007

(이병천 2011, 39). GDP 대비 상위 30대 재벌의 자기자본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 상위 5대 재벌과 관련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들의 생산성은 두드러지게 높았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의 커다란 증대와 30대 재벌들의 평균 이하로 낮아진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 즉 철저한 인건비 통제와 무관하지 않다(김상조 2010).

년 펀드붐 등을 야기한(그리고 이러한 호황세가 견인하기도 한) 주가 급등, 초국적 자본의 소유지배 증대에 결박된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지상주의 경영이 가져온 가계대출 경쟁 및 소비자 신용 과잉, 2000년대 중반 국내 주택 가격의 폭등과 주택투기붐,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형태의 다양화, 대학가의 부자학 개론 과목 개설 및 투자동아리의 확산, 2002년 한 신용카드 회사의 광고 이후 유행하게 된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부자되세요!’ 담론의 대중화, 재테크 및 금융적 교양과 관련된 서적 및 정보의 폭증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중들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행위에 개입되도록 하고 대중들의 일상생활을 급속히 금융화함으로써, 국내에서 공공적 가치가 우선시되던 시민사회를 자산적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금융화된 사회’로 급속도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Harmes 2001; Martin 2002; 장진호 2008a).¹⁶⁾

이처럼 국내에서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국내 정치민주화의 진전 및 역동성의 기반으로 작용해온 노동의 힘과 시민사회의 역량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금융 자유화와 지구적 금융시장과의 통합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에서 계속 전개되고 확산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구조 전환 및 경제 금융화와 연관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통해 개인적 자산투자의 에너지로 흡수전환되거나 굴절되었다. 금융화와 이에 따른 자산적 개인주의의 확산은 1998년 이후 국내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

16) 이와 관련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이중성이 심화되어 ‘공공적 시민사회’와 ‘욕망의 시민사회’가 서로 대립하고 공존하는 모순이 현실로서 존재함을 지적하는 논의도 있다. 여기서 ‘욕망의 시민사회’는 개인적 성공과 자산증식을 추구하는 삶의 공간이며,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해결책의 추구보다는 기회주의 및 현실 순응주의를 강화시킨다(신진욱 2010). 본고에서 언급하는 시민사회의 금융화는 바로 후자인 ‘욕망의 시민사회’와 관련된다.

동유연화, 경제개방 가속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함에 있어서 노동대중의 저항을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대항력, 즉 대중들을 탈정치화 혹은 보수적으로 재정치화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¹⁷⁾ 특히 선거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자산적 개인주의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정치세력에 투표하기보다, 부동산 개발이나 규제 완화 및 이와 연관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자자/소유자 자산 가치의 증식을 공약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에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10년간 소위 ‘민주정부’의 집권에 이어 마침내 2008년 이명박 정부라는 보수적 집권세력의 복귀로 이어지는 길을 닦는 (의도되지 않은) ‘정치적 프로젝트’로 작동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¹⁸⁾

민주적이고 공공적 가치에 기반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신이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올려줌으로써 개인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하는 정치세력을 우선 지지하는 주체로 대중을 재편하는 새로운 정치학이 현재 국내 정치인과 대중의 상식이 된 것도, 이러한 금융화와 같은 역사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금융화는 단지 경제구조나 제도 혹은 일상생활 차원의 변화와만 맞물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현실 및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치적 성격

17) 심지어 대기업 사장님들은 노동자들에게 자사주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파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의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파업을 하지 않으면 주식을 주겠다”며 ‘당근’으로 제시된 현대차 자사주가 사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생산성 향상, 회사 이미지 개선 등으로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무분규’ 주식 4500억 푸는 현대차 … 계좌 보고 웃는 직원들,” 『한국경제』, 2011년 10월 27일자).

18) 최근 몇 년간의 투표 행태와 부동산 가격간의 긴밀한 함수관계를 지적하는 논의들이 다수 존재한다 (“무상급식 투표와 부동산, 함수관계는?” 『Money Week』, 2011년 8월 30일; “서울 투표와 서울 부동산,” 『중앙일보 조인즈랜드부동산』, 2011년 8월 24일 등). 이 논의들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 혹은 그럴 여지가 있는 정치세력을 유권자는 심판하고 부동산 가치가 높게 유지되는 지역의 거주자들은 보수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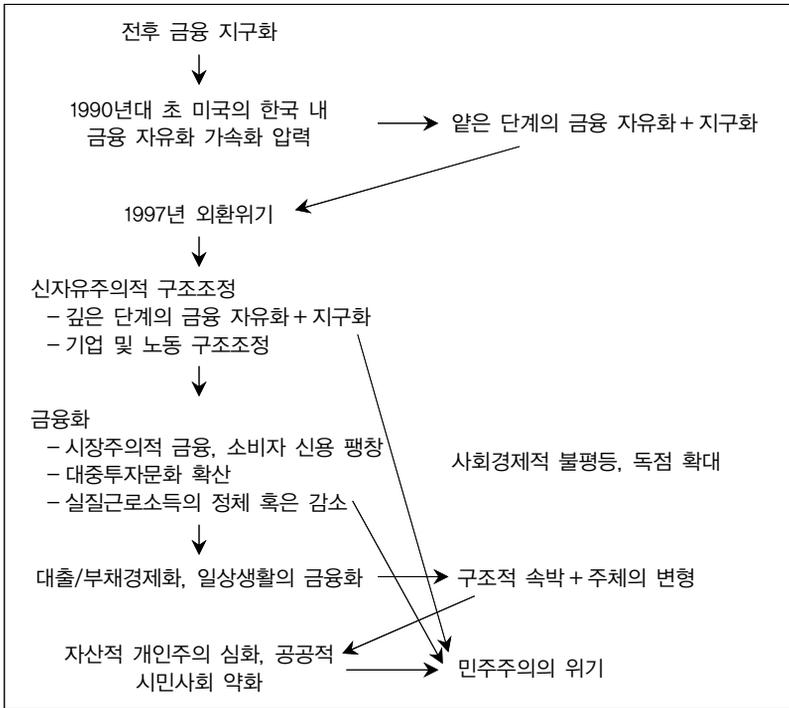
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금융화의 정치(politics of financialization)’는 공적 가치에 헌신된 민주적이고 집합적인 주체를 개인적 자산증식에 헌신한 경제주의적이고 개별화된 주체들로 분해/전환하여 정치적으로 탈동원하거나 보수적으로 동원하는 ‘자산적 개인주의의 (탈)정치’이기도 하다. ‘금융화된 주체’로 개인들을 변형시켜온 과정은, 대중들에게 내재하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저항의 역량을 전환하여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테크놀로지(재테크)의 향상에 몰두하도록 하는 한편,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화된 대중의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파편화·분산화·상쇄하는 정교하고 암묵적인 정치적 과정이 되었다. 지구화된 금융자본의 운동에 국내 경제가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고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금융화가 더욱 진전되어갈수록, 이제 개인은 민주주의의 확대나 진보적 개혁의 가능성보다 주가 혹은 기타 금융적 투자수익의 급등이나 실물 자산가격의 폭등에 더욱 흥분하게 되고 마침내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주의적 포위와 포섭은 정점에 이르게 된다. 내용이 텅 비어버린 민주주의의 형식과 틀 속에서 증대되는 경제적 격차와 불안, 상실의 증대, 사회의 해체는 민주적 가치나 ‘민주주의’라는 용어/관념에 대한 대중적 불신, 회의주의나 냉소주의의 만연과 결합되고, 여기서 대중들이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을 회구하거나 파시즘과 같은 극우정치적 포섭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게 된다.¹⁹⁾

19) 좀 일반화된 맥락이기는 하지만, 불안에 처한 개별화된 주체들의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으로의 회귀는 새롭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에리히 프롬(Fromm 2012)은 독일에서 나치즘의 부상을 1차 대전 후의 격변 속에서 개개의 독일인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불안을 독일=나치당에 대한 집단적 지지와 복종으로 해소하고자 한 결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내에서 10~20대의 젊은층 이용자들이 최근 매니아적으로 몰두하는 <일간베스트>(약칭 ‘일베’)라는 다소 하위문화적인 동시에 극단적으로 반동적인 어느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쓰여지는 공식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동학



용어 표현 중에, 특정 게시물에 대한 방문자의 '동의'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마우스로 클릭하도록 하는 배너의 표현 중 '반대' 항목을 '민주화'로 표기하고 있기도 하다. 즉 여기서 그 인터넷 사이트를 애용하는 젊은층 이용자들에게 민주화는 '그저 반대하는 것' 혹은 '부정적인 무언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지시된다.

5. 맺음말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은 대중들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 특히 경제적 시스템의 이상적 표준에 대한 상을 재전환하도록 하는 세계사적 압력과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전 십수년간 국내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용어와 결부되며 이상적 경제모델로 간주되어온 영미식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매력, 혹은 국내에서 ‘금융허브’라는 이상향에 대한 그것은 현재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그리고 장기간의 경제적 불황이 전망되는 세계 속에서, 이제 개인들이 지금까지의 자산적 개인주의에 의존하여 자신의 생계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부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가능성과 낙관적 전망은 전보다 낮아진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최근 다시 변화된 조건들은, 국내에서 그간 금융화를 심화해 온 ‘욕망의 시민사회’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다시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적 시민사회’를 전면화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이고 구조적으로 진전되고 심화되어 온 금융 자유화/지구화와 더불어 (일상생활의) 금융화가 국내에서 급속히 확립된 까닭에, 공공적 시민사회의 확고한 영역 재구축은 대중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 가치관의 전환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대중들의 주체성의 재전환 즉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주체화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의 전환과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화를 이끌어가는 신자유주의의 힘이 경제구조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여전히 시민사회를 강하게 포획하는 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 구조와 제도들 속에서 크게 작용하는 금융

지구화의 규정력을 축소하고 금융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새롭게 민주주의의 진지로 재구축하는 과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가령 국내 금융시장에서 초국적 자본이동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거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국적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에 크게 노출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그리고 구조조정을 만성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주중심 경영과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대안을 확산시키는 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수익성 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자산거품의 급속한 형성과 폭락의 주기로부터 대중들의 삶을 보호하는 일 등은 대중들의 삶 속에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면서 공공적 가치를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문제와 관련된 대출/부채경제의 속박 및 자산적 개인주의의 문제가 한국적 자본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심에 놓여 있다고 볼 때,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억제 강화, 세입자의 주거 안정 보장, 그리고 공공주택 보급의 확대와 주거의 질 개선 등이 특히 긴요한 ‘민주주의적’ 과제임은 분명하다(신진욱 2011).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관련 의제들에 대한 소수 경제관료 및 전문가들의 일방적 결정 및 정책 형성과 추진을 벗어나고, 공적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폐쇄적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일 역시 중요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전창환 2011). 대중들의 참여 민주주의적 과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복지국가와 문화사회 건설이라는 심화된 민주적 과제 역시 이처럼 금융화된 경제 구조, 그리고 금융화된 시민사회와 금융화에 포박된 개인적 일상성으로부터 대중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금융경제연구소. 2010. 『G20을 넘어 새로운 금융을 상상하다』. 민.
- 김상조. 2010.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한국사회경제학회·안현효 편.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 김수길·이정재·정경민·이상렬. 2003. 『금고가 비었습니다: DJ 정권 5년의 경제실록』. 중앙M&B.
- 김순영. 2011. 『대출 원하는 사회』. 후마니타스.
- 신진욱. 2010. “‘육망의 시민사회’를 넘어서.” 『프레스이안』(2010.2.8).
- _____. 2011.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거자본주의 체제의 특징.” 『동향과 전망』 제81호. 112-155.
- 유철규. 2008. “금융화와 한국 자본주의: 특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제73호. 139-169.
- 이병천. 2011.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 수출주도 수익추구 축적체제의 특성과 저진로 함정.” 『동향과 전망』 제81호. 9-65.
- 임종인·장화식. 2008. 『법률사무소 김앤장』. 후마니타스.
- 장진호. 2008a. “일상생활의 금융화와 부자되기 신드롬.” 한국문화인류학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11월 24일)(<http://www.koanthro.or.kr/data/data/jg/500/11.pdf>).
- _____. 2008b. “금융 헤게모니로서의 신자유주의 분석: 역사·동학·행위자들.” 『경제와 사회』 제80호. 315-342.
- _____. 2011a. “복지국가와 금융: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40호. 39-61.
- _____. 2011b.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재생산구조의 변화.” 조돈문·배성인·장진호 편.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메이데이.
- _____. 2012. “한국 노동 체제의 특징과 “유연화의 정치”.” 최태욱 편. 『갈등

- 과 제도: 한국형 민주, 복지, 자본주의 체제를 생각한다』 3장. 후마니 타스.
- 전창환. 2008.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경쟁.” 『동향과 전망』 제73호. 100-136.
- _____. 2011. “1997년 한국의 외환,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증권화.” 『동향과 전망』 제81호. 112-155. 70-109.
- 제윤경·이현욱. 2012. 『약탈적 금융사회』. 부키.
- 조복현. 2007.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국제금융자본과 한국경제』. 한울. 5장.
- 조희연. 2008. “한국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에 대한 비교사회적 연구.” 조희연·김동춘 편.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 연구』. 한울
- _____. 2009. “1987년 이후 한국에서의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치 사회적 동학.” 조희연·김동춘·오유석 편.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사회경제적 독점’의 변형 연구』. 한울. 서장.
-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 차병석 외. 2012. 『MB노믹스 숨겨진 진실』. 한국경제신문.
- 홍기빈. 2008. “금융화의 이론적 규정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제73호, 11-50.
- Aglietta, Michel. 2000.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erience*. Verso(New Edition).
- Amsden, Alice. 1994. “The Specter of Anglo-Saxonization Is Haunting South Korea.” In *Korea’s Political Econom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by Lee-Jay Cho and Yoon-Hyung Kim, eds. Boulder: Westview.
- Armijo, Leslie Elliott, ed. 1999. *Financial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n Emerging Market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Arrighi, Giovanni.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Verso.
- Bockman, Johanna, and Gil Eyal. 2002. "Eastern Europe as a Laboratory for Economic Knowledge: The Transnational Roots of Neolibera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2).
- Centeno, Miguel Angel. 1997. *Democracy within Reason: Technocratic Revolution in Mexico*.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Second Edition).
- Chossudovsky, Michel. 1998[1996]. 이대훈 역. 『빈곤의 세계화』. 당대.
- Dezalay, Yves, and Brayant G. Garth. 200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 Lawyers, Economists, and the Contest to Transform Latin American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ménil, Gérard, and Dominique Lévy. 2006. 이강국·장시복 역. 『자본의 반격』. 필맥.
- Fromm, Erich. 2012[1941]. 김석희 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휴머니스트.
- Gowan, Peter. 1999. *The Global Gamble: Washington's Faustian Bid for World Dominance*. Verso.
- Harmes, Adam. 2001. *Unseen Power: How Mutual Funds Threat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Wealth of Nations*. Stoddart.
- Harvey, David. 2007.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lleiner, Eric. 1994. *States and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From Bretton Woods to the 1990s*. Cornell University Press.
- Henwood, Doug. 1998. *Wall Street: How It Works and for Whom*. Verso (Updated Edition).
- Johnson, Simon, and James Kwak. 2011[2010]. 김선희 역. 『위험한 은행』. 로

그인.

- Kim, Eun Mee. 1997. *Big Business, Strong State: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 1960-1990*.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_____. 2000. "Glob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Chaebol." In Samuel Kim, ed. *Korea's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2-125.
- Kwon, Eundak. 2004. "Financial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4(1): 70-101.
- Lazzarato, Maurizio. 2012[2011]. 허경 외 역. 『부채인간』. 메디치.
- Lewis, Michael. 2012[2011]. 김정수 역. 『부메랑』. 비즈니스북스.
- Lipietz, Alain. 1991[1985]. 김종한 외 역. 『기적과 환상』. 한울.
- Martin, Hans-Peter, and Harald Schumann. 1997[1996]. 강수돌 역. 『세계화의 뒷』. 영림카디널.
- Martin, Randy. 2002.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Mason, Paul. 2009. 김병순 역. 『탐욕의 종말』. 한겨레출판.
- Polanyi, Karl. 2009[1944].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길.
- Porter, Tony. 2005. *Globalization and Finance*. Cambridge: Polity.
- Ruggie, John Gerard. 1998. *Constructing the World Polity: Essays on Inter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Routledge.
- Seabrooke, Leonard. 2001. *US Power in International Finance: The Victory of Dividend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Shin, Jang-Sup, and Ha-Joon Chang. 2003. *Restructuring Korea Inc.* New York: RoutledgeCurzon.
- Soederberg, Suzanne. 2004. *The Politics of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Reimposing Neoliberal Domination in the Global South*. Zed.

Strange, Susan. 1997[1986]. *Casino Capitalism*. Manchester University Press.

Teivainen, Teivo. 2002. *Enter Economism, Exit Politics: Experts, Economic Policy and the Damage to Democracy*. Zed.

Thurbon, Elizabeth. 2003. “Ideational Inconsistency and Institutional Incapacity: Why Financial Liberalisation in South Korea Went Horribly Wrong?” *New Political Economy* 8(3): 341-361.

〈언론보도〉

『중앙일보 조인즈랜드부동산』.

『한국경제』.

『Money Week』.

투고: 2013.4.6 심사: 2013.4.12 확정: 2013.5.8